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2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7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성일종 · 고동진
김상훈 · 김종양 · 서명옥
유용원 · 배준영 · 박준태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, 학교의 장 등에게

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 기록 내역,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 기록 내역,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,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·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의2(확인신체검사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7조의2(확인신체검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</u> <u>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</u> <u>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</u> <u>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<u>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</u> <u>기관의 장, 「국민건강보험법」</u> <u>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</u> <u>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</u> <u>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</u> <u>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</u> <u>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</u> <u>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</u> <u>기록 내역, 학교생활기록부 및</u> <u>학생건강기록부, 병역처분변경</u> <u>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의 제</u> <u>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</u> <u>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</u> <u>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</u> <u>따라야 한다.</u> ③ <u>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</u> <u>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</u>
<u><신 설></u>	

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<u>대한 정보 · 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 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④ · 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	--